

“尹 탄핵! 내란 범죄 처벌하라”... 전북자치도의회 야3당 한목소리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 갖추지 못한 위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 39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야 3당을 대표해 문승우(더불어민주당, 군산4) 의장,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 오현숙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등 야 3당 소속 39명의 도의원은 5일 오전 10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탄핵! 내란 범죄 처벌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문승우 의장은 “유신 독재의 광기가 전국을 짓누르던 1970년, 시인은 시대의 어둠을 이렇게 밝혔다.”며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낭독했다.

그는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라며,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희생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며, “국민을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유신 독재도 광주를 피로 물들였던 군산 독재도 이겨냈다.”라며 “찬란한 산업화와 성숙한 민주화는 우리의 긍지이며 자랑스러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국민이 일으킨 민주공화국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다.”며, “국민을 공포로 나라를 버릴 꼴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직접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야 3당인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소속 의원 39명이 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탄핵! 내란 범죄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尹 계엄 관련 “계엄법 절차 갖추지 못한 불법 행위”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고 승리하겠다” 결의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는 다음과 같다.”라고 말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학회, 시민단체, 언론, 사법,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에 대한 유일한 법률적 통제 기구인 국회를 폐쇄하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결실인 지방자치를 원천 부정했다.”

며,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갖추지 못한 위헌이고 계엄법으로 정한 ‘국무회의의 심의, 국회 통고 등’의 절차도 갖추지 못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진보당 소속 오은미 의원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추천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의 법률적 정치적 정당성은 2024년 12월 3일로 끝났다”

고 말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은 민주적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며,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국회 탄압의 도구로 이용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등 정권의 부역자들 역시 단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박근혜 정권에 이어 탄핵이 국가 정상화의 발판이 되는 불행한 정국이 시작됐다.”며, “하지만 피할 수 없다. 국회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0명 전원이 참여한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가결돼 헌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소속 오현숙 의원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했다.”며 “이는 내란죄의 부역자가 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당론 채택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히 국민의 안위보다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유신 독재 아래에서 시인은 ‘숨죽이며 남몰래’ 민주주의를 새겼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전북 도민과 함께 단호하고 품격 있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과 내란범죄자들의 처벌을 위해 결연히 나서겠다.”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북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고 정의롭게 승리하겠다.”고 말하며 마지막 “감사합니다.”라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도의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 범죄 처벌을 촉구하며, 모처럼 만에 야 3당 도의원이 한목소리를 냈는데, 시인 김지하의 시에서도 윤석열 탄핵과 내란 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을 시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계엄 해제 요구안 대통령에 도달 시 즉시 효력 상실

민주당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발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실체적·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가 해제 지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5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즉시 계엄의 효력 상실을 명문화하는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의결되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 규정으로 해제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한 뒤 “소속한 계엄 해제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받잡을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계엄 해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계엄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만금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 위한 제도 강화

세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의 안정적 폐수처리대책 마련에 필요한 관련 법률이 개정 착수 절차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열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하는 염인정제도를 강화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정부에 안정적 폐수처리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으로 환경부 등이 이차전지폐수 관련 다양한 연구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우선 염인정 평가를 위한 해양생물 독성검사시 보통 발광박테리아 1종에 대해 검사했던 것을 이차전지 열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해 2종으로 명확히 했다.

독성검사서 해양생물종에 독성이 발현되면 염인정을 받을 수 없고, 염인정을 받은 기업도 생산시설 변경이나 행정기관의 불시점검에서 해양생물 독성이 발현되면 염인정이 취소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도 시행규칙 개정(안) 등 정부대책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이해당사자인 어민·기업은 물론 환경단체 등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불시점검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실시간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과 민간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환경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당 의원, ‘계엄 효력 자동 상실법’ 대표발의



5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아 호남권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애국지사들의 애국정신 확산시킬 것”

김관영 도지사, 호남권 유일 생존 이석규 지사 찾아 위문

이석규 애국지사,尹 비상계엄 선포 등 현 상황과 관련

“어려운 시기일 수록 단합해 민주주의 가치 수호해야”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5일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아 호남권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선생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신현석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정도일 전주보훈요양원장,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동행해 이석규 애국지사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이석규 애국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공로로 2010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현재 국내 생존 애국지사 4명 중 호남권에서 유일한 생존자로 알려져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권을 잃었던 일제강점기,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님들이 계셨기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평등하고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던 동학농민혁명부터 3.1혁명, 4.19혁명 등으로 이어진 저항과 개혁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전북이 민주주의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이어 “도 차원에서도 애국·애국정신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전북인의 자긍심을 더욱 높여겠다”며, “앞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년 2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호국보훈수당을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청년위 “위헌적 계엄령 선포한尹 즉각 사퇴하라”

“시대를 역행하는 지도자는 더이상 설 자리 없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 곳곳에서 연일 성명서와 시위 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박경태 군산시의회 의원·사진)에서 ‘위헌적 계엄령 선포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 위원장은 “시간을 역행하는 지도자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시간 여행자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서 미래로 오거나,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사람을 말하는 허황된 단어.”고 말했다.

그런데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 황당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며 “바로 윤석열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은 12월 3일 밤,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하며, “즉시 특수부대는 국회를 예워주고, 국민은 큰 혼란에 빠졌으며, 환율은 폭등했고, 국가 경제는 혼란기에 흔들



렸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그 책무를 스스로 저버렸다.”라며,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포기했으며, 국민을 억압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반헌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본인의 잘못을 감추려는 절망적인 시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과거 독재를 끌어내리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다.”며, “전북의

청년들은 무책임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은 국민을 위협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동이다.”며, “그러나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은 윤석열,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시대를 역행하는 지도자는 이 나라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전북의 청년들은 윤석열 정권을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그 책임을 묻고 싸워나갈 것이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청년위원회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로 현재 인준받은 회원은 400여명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직능위 “독재 망령 부활...尹은 즉각 사퇴하라”

“계엄 선포 단호히 거부... 내란 범죄 책임지고 즉각 하야해야

공범자들 체포·수사... 탄핵 가결 반대하는 국힘은 해체해야”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연일 기자회견과 시위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위원장 최유·사진)는 “독재 망령 부활 윤석열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유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2024년 12월 3일 저녁 대한민국은 45년 만에 극악무도한 독재자에 망령이 부활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며, “준엄한 민주주의를 배신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정치 모리배들의 처벌을 달기 위해 취한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독재의 망령을 부활시키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민주인사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거리에서 감옥에서 때로는 죽음으로 이뤄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다시 총칼로 위협해야 할 정도로 전시, 사변의 상황인가?라며, “오직 무질서하고 전시 상황으로 판단할 유일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독재조력자들의 썩은 만능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 것 오직 그것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는 독재 망령으로 부활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단호히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내란 범죄에 가담한 반민주, 반국가 세력은 반드시 체포, 수사해

반드시 민주주의의 신성한 제단 앞에 세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의 엄중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죄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내란 범죄 공범자들을 체포, 수사해야 하며, 탄핵 가결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는 도내 소재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를 비롯한 각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이와 관련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의 엄중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죄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내란 범죄 공범자들을 체포, 수사해야 하며, 탄핵 가결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하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의 엄중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범죄 책임을 지고 즉각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고, 내란 범죄 공범자들을 체포, 수사해